

[제 13차 6월광장 월례포럼]

한국의 미래,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는가?

- 민주당 노무현 최고위원 초청토론회

토론회 / ~~토론회~~
국민의회의 의사진행 순서
→ 국민에 대한 설명 대신
자세한 개방정책
- 122개 장항선 변경

1. 개회 선언과 취지 설명(사회자, 7시 30분)
2. 인사말(오충일 목사)
3. 발표자 소개(사회자)
4. 발표(7시 35분 - 8시 5분)
5. 분야별 질의응답
6. 감사패 증정(최열 운영위원장)
7. 뒷풀이

- 정신에 관한 문제
○ ~~가~~

□ 노무현 최고위원, 「6월광장 월레포럼」 기조 발제

한국사회의 개혁과제

통합 없이 개혁 없고, 개혁 없이 진보 없다.

1. 현재의 상황

- 국제 정세의 위협, 불안요인 증가
- 경기의 위축과 불안감 확산
- 정치 불신 극대화
- DJ정권에 대한 지지의 급격한 하락(20%)

2. 위기의 원인

1) 달라진 갈등해소의 방법

사회, 공동체에서는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됨. 과거에는 권력의 힘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했으나 6월항쟁이후 시민은 더 이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 그 후 노태우, 김영삼정권을 거치면서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이 일상화되었

음. 우리 국민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사회문화적 의식의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림.

2) 지역구도에 기반한 정치지형

예1) YS정권시절

박철언의 구속과 PK의 이반 → JP와 충청권의 이반 → 한보청문회를 통한 수구세력의 집중공격 → 정권의 몰락

박철언, 이회창 영입
예1. 대한의 노선이 전향화.

예2) 서상목 체포동의안 부결과 한나라당 의원들

3) 수구세력의 저항

현정권은 초창기 수구세력과 영남권을 포섭하려는 전략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 포용도 실패하고 개혁세력의 이탈만 초래.

4) 리더십의 몇 가지 문제점

폐쇄성, 권위주의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나 이러한 리더십문화는 권위주의 시대의 기나긴 반독재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쉽게 고쳐질 수 없는 문제임

5) 준비의 부족과 시행착오, 조급함

이 중 핵심적인 요인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구조

☞ YS도, DJ도,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정치지도자들 이었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환경 하에서 결코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음

현 정권의 국정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현재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위기와 지지도 하락을 초래 했을 것

3.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

1) 전략적 사고 : 정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

- 잘한 일은 밀어주고
- 못한 일은 비판하되
- 시대적, 정치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시대의 과제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자세

2) 통합의 리더십 구축

동서통합 없이 개혁 없고 개혁 없이 진보 없다.
동서통합은 합리적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

- 동서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 민주세력과 개혁세력을 결집한 정계개편
- 분권과 통합의 New Leadership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정치 문화의 창출

3)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구축 - 문화 개조

- 대화와 타협의 문화
 - 관용의 정신
 - 서로 다른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합리주의
 - 세력균형, 균형사회
- 신뢰와 원칙

- 가치지향의 문화 : 기회주의와 모리주의 문화의 청산
- 시민적 자존심의 확립

4. 몇가지 보론

1) 국가지도자의 Vision에 대해

- 자격없는 지도자들에 의해 진실없이 외쳐짐으로써 이제는 vision을 믿지 않는 시대(정의사회구현, 보통사람의 시대, 신한국건설.....)
-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진로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지도자의 vision이 갖는 공허함
-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미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 주장의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걸어온 과거를 정확히 헤아려 보아야 할 것

2) 차기 대선에 대해

- 대통령 선거의 과정은, 그 시기 그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역사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임.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의 논쟁이 논쟁다워야 선거 이후에도 그 사회는 건강성을 유지 할 수 있음
- 다음 대선에서는 개혁과 수구, 통합과 분열의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임. 이는 결론적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세력과 과거

로 돌아가자는 세력간의 乾坤一擲의 대결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함

3) 민주세력의 과제에 대해

- 보다 깊고 넓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역사적 통찰력
-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자
- 16대 대선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주체적인 입장을 세우자

[제 13차 6월광장 월레포럼] 분야별 질문 요지

다음정당,

와신상당정당,

정치개혁 분야(정대화 상지대 교수)

1. 2002년 대통령선거 출마와 관련

- 노무현 상임고문은 본선에는 강하지만 예선에서 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방법과 다른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해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 당 내에서 김근태 최고위원과의 연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그런지?
- 한화갑 최고위원의 출마 선언이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민주당 이인제 고문에 대한 평가는?

2. 정당 민주화와 관련된 질문

- 정당문제는 정치문제의 근원입니다.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정치가 민주화되고 활성화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 정당이 민주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민주적 공천이 가능하고, 이에따라 선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정당의 당론결정과정도 민주적이어야 의회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거와 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적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정당을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들 구상이 무엇입니까?
- 정당문제의 핵심은 공천문제와 지구당의 활성화 문제일텐데 양자는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공천권 없이 지구당 활성화가 불가능하고, 또한 지구당이 활성화되어야 공천권 부여가 가능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당에 과감하게 공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분위기를 일신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삼권분립과 국회 활성화에 관한 질문

- 삼권분립은 현대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삼권분립은 우리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 우리의 경우 대통령권한이 과잉비대했던 과거 유신시대의 이른바 '신대통령제'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상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의 권한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능을 증대시킬 방안이 무엇입니까?

4. 불완전한 정치개혁법 보완 문제

-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부패방지법 등 불완전한 개혁 입법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국민의 정부가 약속했던 특별검사제, 인사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법이 모두 법제화되었습니다만 국민들이 크게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위 네 가지 정치개혁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가능하다면 각 개혁안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5. 지역감정 극복 방안

- 을 해결하는 것은 민족통일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동서갈등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거과정이나 선거 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6. 다원적 정당체계 문제

- 서구 정당과 비교할 때 정당체계(political system)의 폐쇄성과 보수성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럽의 경우 극좌파부터 극우파가 동시에 공존하는 다원화된 이념정당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50년 이상 보수일변도의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보정당 혹은 개혁정당의 존재가 정치적 민주화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지? 가까운 장래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진보정당이나 개혁정당의 출현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 보수정당, 자유주의정당, 개혁정당 혹은 진보정당으로 정당체계가

7. 정치자금, 국고보조금 등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임. 그러나 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자금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개적으로 깨끗한 선거를 국민들 앞에 선언하고 선거자금 전체 비용을 선관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 정당 운영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당원의 당비나 후원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말하자면 정당이 국민이나 당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의존해서 운영된다는

것인데, 국고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당비와 후원금의 비중을 늘이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의 구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구당 공천권 부여 -> 지구당 활성화 -> 당비납부율 증대)

7.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 김영삼정부도 김대중정부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정당회담이 실현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어도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가슴에 품고 선진국이니 민주주의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정치후진국의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8. 평화협정, 군축, 국방비 문제

- 아무리 좋은 공약을 제시해도 정치력과 재정력,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행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람을 위로하는 말은 불운이라는 단어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정치의 효시 마키아벨리도 정치인의 덕목으로 행운(fortuna)을 강조했습니다).

-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경제재건을 이룩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때 국가예산의 23% 내외를 차지하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경제발전, 사회복지, 교육문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 -> 평화협정과 군축 -> 국방비 감축 -> 사회경제적 발전의 패러다임이 곧 현실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태우정권의 직선제 수용과 일부 형식적인 민주화 조치 -> 김영삼정권의 정치개혁과 탈군사화 -> 김대중정권의 재벌개혁의 순서로 민주화와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그 역사발전의 연장선상에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구조와 예산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관계를 안정시켜 평화협정과 군축을 통해 국방비를 감축하는 전략이 군부를 제외하고는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단, 김대중정권의 재벌개혁이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경우 재벌개혁의 재추진을 선언할 것인지가 고민)

외교통일(양관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 현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교류협력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 통일문제는 한 지역, 계급, 계층의 이익을 초월하여 전민족의 공통의 염원이고 과제이고 우리민족 전체가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

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찬반이 갈라지고 있다. 통일정책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고 우리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통일정책과 지역주의 감정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2. 민족주체적 자주외교에 대해서 묻고 싶다.

6·15남북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남북간에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했다는 점이다. 분단 이후 북한은 친러, 친중국관계를, 한국은 친미, 친일관계를 기본적인 외교방침으로 유지해왔다. 이것을 냉전적 분단외교라고 한다면 탈냉전시대에 들어간 21세기에는 탈냉전적, 통일지향적, 민족자주적 외교전략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외교전략을 국가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면 국익과 민족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남북관계, 교류협력,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남북이 협력하여 민족자주적 외교를 해나간다면 주변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노위원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다.

3. 미국의 테러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 한국에서 개혁 진보세력은 대부분 통일지향적, 탈냉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노위원님이 생각하는 <통합>이라는 정치과제에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말하자면 <지역적 통합>이 주요개념으로 상정되어 있다. 물론 세대간, 계층간 통합도 중요한 과제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 확대되기 때문에 구조적 대립은 필연적이지만 그런 갈등을 가능한 완화하고 <국민적 통합, 민족적 통합>을 만들어 가려면 구체적 정책이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개혁과 수구보수>가 갈라진다고 본다. 지역적 통합, 국민적 통합, 민족적 통합에 관한 구상을 듣고 싶다.

노동문제(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1)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 이들의 고용불안, 차별대우가 심각하고 노동조합 결성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정치적 보호가 시급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침은?

2) 실업자(특히 강제적 실업자인 정리해고 노동자)에겐 단기 6개월, 장기 9개월의 실업 급여 및 교육·훈련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주 5일 40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노

시간 이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월차 통합과 휴일 축소, 1년 단위 탄력적 근로, 생리휴가 무급화,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 등입니다. 실제 노사간 합의의 전망은 없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방침은?

4) 민주노총 입장에서 볼 때,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정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5) 산별노조는 이제 대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 정부의 적극적 방침 부재로 인하여 앞으로 큰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방침은?

6) 최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수감되었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교육개혁(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교육부문 공약은 당시 김대중,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 모두 지엔피 6%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지엔피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김영삼 정부시기보다 교육재정은 감축되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교육재정 감축의 직접적인 결과는 교원수급의 실패입니다. 오이씨디 각국의 교육재정은 지디피 5-6%선이며, 이중의 70%는 교원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은 70%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수급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라 할 정도로 '기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지엔피 6%선의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양성에서 임용과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원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지표'를 개선하는 핵심과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감축으로 이렇듯 '교원수급'과 '학급당 인원감축'이라는 기본교육여건의 개선이 일관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나 교과목/교육과정 선택 방식으로 '엘리트 선별'교육을 통해 기본교육여건의 악화를 미봉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선시기의 공약에 대한 위배입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이번 국감에 공표한 자료에서도 6% 교육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1997년에서 2002년으로 미루어선 이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후보가 되신다면, 6% 나아가 7% 라도 교육재정에 쓰겠다는 공약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나아가 성과급이나 자립형 사립고, 우수학생 집중방식의 교과목 선택제 등 '엘리트 교육' 정책을 고수하실 것인지요?

여성문제(정강자 여성민우회 회장)

1. 소위 '여성문제'라고 통칭되는 것의 핵심적 내용, 본질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2. 최근 '여성문제'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호주제 및 자녀의 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4. 최근 모성보호 관련한 노동법 개정시에 노동자단체, 여성운동단체와 경제계에서 큰 이견이 있었는데 모성보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
5. 구조조정시에 여성에 가해지는 차별현상(예, 농협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등) 및 여성의 비정규직화. 주변화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6. 청소년 성매매에 대가성을 부인한 최근의 몇몇 판결과 신상공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7. 공창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8. 최근 사후피임약인 노래보정의 수입허가를 둘러싸고 각 단체마다 이견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
9. 거둬드는 여성연예인의 비디오 파문이나 이영자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10.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
11. 양성평등하며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의 대략은 어떠한가요 ?

사법부개혁(이석태 민변 부회장)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인적청산은 커녕 오히려 옷로비사건, 파업유도 사건 및 최근의 대형 주가조작 사건에서 보듯 권

력 유착과 부패가 더 심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처럼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검찰 개혁의 전망은 어떤가."

환경문제(김호철 환경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 소장)

- 정부의 개발정책 때문에 환경문제 야기
- 정부의 개발정책 위주의 부서를 재편해야 함.
- 핵위주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에 질문.

기타

중도 보편 세력. - 환경.
↓
개발주의 집중리해
환경보존
개발, 환경
모두 중요. 인제 2차